

경제성장과 소득 분배

방형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머리말

최근 한국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에서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면 경제성장을 제고(提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전통적인 낙수효과에 기반하여 소득 불평등이 일시적으로 악화된다 하더라도 중국에는 경제 전체로 성장의 과실이 나누어짐에 따라 전체적인 소득 수준이 늘어날 것이라는 시각에서부터, 소득 불평등 자체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불평등을 해소하거나 낮추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분배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견해를 놓고 경제학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논쟁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놓고 보면, 경제성장과 소득 분배의 관계에 대해 아직 이해가 충분치 않은데다가 연구 결과마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모두가 동의할 만한 결론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





고는 현재까지 경제학계, 특히 경제성장 분야에서 진행된 경제성장과 소득 불평등에 관한 여러 연구를 소개하고, 이러한 논의의 기저에 있는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쿠즈네츠 가설

경제성장과 소득 분배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쿠즈네츠 가설에서 시작한다. 쿠즈네츠(Simon Kuznets)가 1955년에 발표한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에 따르면, 한 국가의 경제는 초기에 소득 분배가 비교적 평등한 상태에서 출발해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지만 종국(終局)에는 불평등이 완화되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쿠즈네츠 가설’이라고 부른다.

쿠즈네츠 가설을 이해하기 위해, 5명의 경제주체로 구성된 한 국가를 상정해보자. 초기에 이 국가는 농업 위주의 저소득 상태에서 출발한다. 5명의 경제주체가 모두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동일한 소득 수준을 영유하며 경제 내의 불평등 정도는 낮다. 하지만 산업화가 진행되어 경제 내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가면서 경제는 점차 성장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구조의 이행(移行)은 단기간에 경제 전체에서 일어나지 않고 순차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경제성장 초기에는 1명의 경제주체가 제조업에 종사하게 되고, 해당 경제주체의 소득은 다른 4명보다 높게 된다. 즉 소득 분배가 불평등한 방향으로 변한다. 경제가 더 성장함에 따라 제조업에 종사하는 경제주체가 2명으로 늘어나면서 소득 불평등의 정도는 더 심화된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제조업에서 일하는 경제주체가 3명, 4명, 그리고 최종적으로 5명으로 늘어나면서 소득 불평등은 완화된다. 다시 말해, 쿠즈네츠 가설은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경제구조의 변화가 경제 전체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득 분배가 불평등한 방향으로 진행되지만, 경제구조의 변화가 확산됨에 따라 소득 분배가 다시 고르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낮은 상태에서 시작했다가 높아진 이후 다시 낮아지는 모습이 U자를 뒤집은 것과 비슷하다 하여 “역(逆) U자 가설”이라 부르기도 한다.

쿠즈네츠의 연구 이후, 쿠즈네츠 가설이 맞는지를 검증하려는 많은 실증 연구들이 있었다.

하지만 쿠즈네츠 가설을 검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수의 연구들은 지니(Gini) 계수나 십분위 분배율 등을 소득 불평등의 척도로 삼고 경제성장률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지니 계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했지만, 지니 계수와 십분위 분배율이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정확하게 대변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또한 실제 경제에는 다양한 산업이 존재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기존 산업의 일부가 사라지므로,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의 노동력 전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터라 소득 불평등의 개선과 악화가 경제 내에서 지속적으로 혼재되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쿠즈네츠 가설 자체가 경제성장과 소득 불평등에 관해서 선형적인 관계가 아닌 역 U자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제 데이터가 쿠즈네츠 가설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알기 힘들게 한다.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의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면, 그 이유가 경제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쿠즈네츠 가설이 틀렸기 때문인지, 혹은 반대로 소득 분배가 개선되고 있다면 이것이 역 U자의 뒷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쿠즈네츠의 예측이 잘못된 것인지를 가려내기란 쉽지 않다.

Lindert and Williamson(1985)는 1688년부터 20세기 중후반까지의 영국을 관찰한 결과,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었지만, 19세기 후반 및 20세기부터는 소득 분배 상태가 악화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Summers, Kravis, and Heston(1984)의 국가간 비교 연구에서도 중진국의 경우 소득 불평등이 하락하고 저소득 국가의 경우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연구도 많다 (Anand and Kanbur, 1993; Fields and Jacobson, 1993).

현 시점에서 학계의 다수는 쿠즈네츠 가설이 옳다고 보고 있지만, 완전한 의견 일치에는 이르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유럽 선진국에서 20세기 중후반 이후 나타나는 소득 분배의 개선과 최근 10~20여년간 관찰되는 미국과 동아시아에서의 소득 불평등 심화 중 무엇이 일시적인 현상이며 어떠한 경향이 장기적으로 지속될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20세기 후반부터 경제학계와 일반 대중의 관심은 경제성장이 소득 분배에 주는 영향이 아니라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면 분배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더 빠른 성장을 위해 일시적으로 용인할 수 있겠지만,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면 소득 분배를 보다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재분배 정책이 경제성장의 측면에서도 지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 영향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해서는 경제성장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대부분의 이론 연구들은 소득이 높고 낮음에 따라 경제주체가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본량이 다르다는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에 근거해서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주는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자산이 많은 경제주체는 많은 담보를 설정할 수 있으며 파산 위험이 낮기 때문에 낮은 이자율에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자산이 적은 경제주체는 담보가 적고 한 번의 투자 실패에도 손실을 만회하기 어렵기 때문에 돈을 빌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빌린다 하더라도 높은 이자율을 감내해야만 한다. 따라서 자본시장이 불완전한 현실에서는 자산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 경제주체가 더 많은 자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의 효율적인 투자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러한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의 틀에서 해석한 연구로는 Aghion and Bolton(1997), Banerjee and Newman(1993), Matsuyama(2000), Piketty(1997) 등이 있다.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통로는 인적자본이다. 만일 고소득 가정 아이들의 교육수준이 높고 기대수명이 긴 반면, 저소득 계층 자녀들의 기대수명이 짧고 교육수준이 낮다면, 인적자본의 양극화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Castello and Domenech, 2002). Castello and Domenech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과 경제성장 간의 부(-)의 인과관계보다 인적자본에서의 불평등과 경제성장 사이의 음의 상관관계가 더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 분배에서의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다. 이론 연구에 있어서는 Galor and Tsiddon(1997), 실증 연구에서는 Forbes(2000) 등이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소득 분배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데, 어떠한 효과가 큰지는 수확체증과 수확체감에 달려있다. 수확체증은 투입하는 생산요소를 늘리면 한계생산량, 즉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생산량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반대로 수확체감은 생산요소의 투입이 증가할수록 추가적인 생산량 증가가 감소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두 경우 모두 생산요소가 증가할수록 총생산량은 증가하지만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생산량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에 차이가 있다.

어떤 경제가 수확체증한다면, 불평등도를 높여서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을 소수에게 몰아주는 경우 효율성이 증가하고 경제성장 역시 빨라진다. 하지만 수확체감하는 경제에서는, 추가적인 자본의 투입에 따른 생산 증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투입요소가 적은 경제주체에게 투입요소를 빌려주거나 분배하는 것이 총생산을 늘리고 경제성장도 촉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성장하는 초기에는 수확체증의 성격을 띠지만 소득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수확체감의 성격이 강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를 흔히 S자 생산함수라고 부르는데, 만일 S자 생산함수가 옳다면, 저개발 국가는 불평등도를 높여서 자본을 소수에게 몰아줌으로써 이들이 높은 효율성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게 한 후, 일정한 소득수준 이상이 되면 재분배 정책을 시행해서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에서의 불평등도를 줄임으로써 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S자 생산함수가 실제로 관찰되는 현상인지는 전적으로 실증 연구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여러 실증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득 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에서 본 여러 연구들은 여전히 불평등이 성장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경제가 수확체증하거나 수확체감하는지에 대해서 일관된 결과를 말하고 있지 않다. 단순히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이느냐에서의 불일치를 넘어서, Barro(2000)는 저소득 국가에서는 불평등과 경제성장이 역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한 반면, Forbes(2000)는 저소득 국가들 사이에도 그 관계가 양(陽)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등 세부적인 측면에서도 상반된 결과가 양립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성장과 소득 분배의 관계나 수확체감과 수확체증에 대해서 선불리 판단할 수 없을 것 같다.



■ 연구상의 어려움

현재까지의 결과를 보면, 이론에서든 실증에서든 소득 분배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일차적으로는 소득 불평등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가 단선적이지 않으며 이중 상호적인 데서 기인한다. 아울러 분석대상인 국가 단위 자료가 가지는 한계도 엄밀한 분석을 힘들게 한다.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면서 학자들이 합의에 도달한 점은, 양자 간의 관계가 단선적이지 않으며, 심지어 선형(線型)도 아닌 것 같다는 점이다. 따라서 둘 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한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소득 불평등은 소득 수준이 변하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득 불평등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경우도 있고 저해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성장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나타날 수 있다.

아울러, 소득 불평등과 경제성장 사이에는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쿠즈네츠 가설에 따르면 경제성장은 소득 분배를 결정하는 한 요소인데, 동시에 최근의 연구들은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소득 불평등도가 변하면 그 자체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며, 이로 인해 달라진 경제성장이 다시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한쪽 방향으로의 영향만을 따로 떼어내서 보는 것은 쉽지 않다. 물론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차변수(lagged variable)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단기적인 직접 효과를 측정할 수 없는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셋째로, 국가 간 자료를 분석하는 경우, 자료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소득 국가의 경우, 행정체계의 미비 및 체계적인 통계 조사의 결여와 부패 등으로 인해 고소득 국가들과 비교해 자료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저소득 국가에서는 부패 및 탈세와 많은 수의 통계 외(外) 인구의 존재 등으로 인해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실제로 보다 낮게 보고될 수 있다. 또한 조사에 집계되지 않는 다수의 인구로 인해 경제성장률이나 경제규모 자체도 적게 잡혔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아울러 같은 거시경제변수를 공유했다 하더라도, 조세 수입을 교육 및 인프라 구축에 얼마나 많이 투자하느냐, 자본시장이 얼마나 효

울적으로 작동하며, 국제 무역에 얼마나 참여하느냐 등도 이후의 경제성장과 소득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단순히 거시경제 변수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은 필연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개인 단위 혹은 가정 단위의 미시적인 분석을 시행한다면 임금 불평등이 개인 및 가계 소득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우리 사회의 주된 관심사는 국가 단위 성장률의 동태와 예측에 있다. 따라서 현 시점의 최선은 미시 연구 결과를 수용하면서 이에 기초하여 거시경제의 움직임을 담아낼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실증연구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작업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은데다, 상술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완벽하게 해소되기는 힘들다.

■ 우리나라와의 관련성

1990년대 이후 경제학계에서는 소득 분배에 대한 연구가 과거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다. 소득 불평등은 분명 경제성장률에 어떠한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성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분배 정책을 펼치는 것 역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수확체증의 경우,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빠른 경제성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불평등이 고착화되는 문제는 고려되고 있지 않다. 효율성을 목표로 하는 경제 성장과 형평성을 과제로 삼는 소득 분배는 한쪽만 잡으면 다른 한쪽도 자연스럽게 달성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동시에 쫓아야만 하는 두 마리의 토끼와도 같다. 낙수효과의 존재 여부,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 필요성에 관한 논쟁 등 현재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논의들은 한 가지 목표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성장과 분배 모두를 균형 있게 배려하려는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물론 한 가지 목표만을 추구해도 나머지 하나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운 좋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양자가 무조건적으로 배치되지도 그렇다고 동행하지도 않는다.

최근 10~20여년간 한국 사회는 낮아진 경제성장률과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소득 분배 기능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것이 그 일책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낙수효과가 실재한다는 가정하에 투자를 촉진하고 성장률을 올림으로써 성장을 통해 분배를 달성하려는 접근과, 소득 불평등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성장까지 달성하려는 접근 등 여러 방법들이 학계와 정치권 및 사회 전반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 둔화의 원인 중 하나가 소득 불평등의 증가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낙수효과의 존재 역시 여전히 설득력 있는 결과가 축적된 상태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의 한국 상황에 적합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소득 국가에서 경제성장과 불평등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보다 명확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성장과 소득 분배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점에서 분석한 이론과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 자료가 나오길 기다려야 할 것 같다. **KLI**

참고문헌

- Aghion, Philippe and Patrick Bolton(1997), “A Trickle-Down Theory of Growth and Development with Debt Overhang”, *Review of Economic Studies* 64(2), pp.151-172.
- Anand, Sudhir and S. M. R. Kanbur(1993), “Inequality and Development: A Critique”,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41(1), pp.19-43.
- Banerjee, Abhijit V. and Andrew F. Newman(1993), “Occupational Choice and the Process of Develop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1(2), pp.274-298.
- Barro, Robert J. and Jong-Wha Lee(2000), “International Data on Educational Attainment Updates and Implications”, Working Paper 7911,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Castello, Amparo and Rafael Domenech(2002), “Human Capital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Some New Evidence”, *The Economic Journal* 112(478), C187-C200.
- Fields, Gary S. and George H. Jakubson(1993), “New Evidence on the Kuznets Curve”, Working Paper.
- Forbes, Kristin J.(2000), “A Reassess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equality and Growth”,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0(4), pp.869-887.
- Galor, Oded and Daniel Tsiddon(1997), “The Distribution of Human Capital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Economic Growth* 2(1), pp.93-124.
- Lindert, Peter H. and Jeffrey G. Williamson(1985), “Growth, Equality, and History”, *Explorations Economic History* 22, pp.341-377.
- Kuznets, Simon(1955),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48, pp.1-28.
- Matsuyama, Kiminori(2000), “Endogenous Inequality”, *Review of Economic Studies* 67(4), pp.743-759.



- Piketty, Thomas(1997), “The Dynamics of the Wealth Distribution and the Interest Rate with Credit Rationing”,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64(2), pp.173-189.
- Summers, Robert, Irving B. Kravis and Alan Heston(1984), “Changes in the World Income Distribution”, *Journal of Policy Modeling* 6, pp.237-269.